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때부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해 방지법 등 많은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이후 수질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분야별로 환경관계법이 세분화하게 되었다.

환경정책은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부터 발달해왔다.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이후 배출시설 관리업무는 시·도가 중앙으로 위임받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84년 중앙지 도·점검반이 설치되면서 중앙정부가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업무를 직접담당하기 시작을 하였다. 1986년 환경지청이 설립되면서 배출시설 관리업무는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구인 환경지청과 시·도가 분장하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1982년 낙동강 폐놀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가 1994년초 낙동

## 시화·반월공단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과 영산강 수질오염사고로 다시 공단내는 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공단외 지역은 시·도가 담당하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중앙과 지방이 번갈아 가면서 관리하거나 공단 외 지역과 내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여 왔다.

현재는 2002. 10. 1부터 공단 내외 모두 시도로 위임되어 경기도의 경우 공단내 배출업소와 1~2종사업장 등 대형업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3~5종 즉 소형업체는 시·군에 재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재위임하여 행정처분 등 책임 한계를 정하고 있지만 광역오염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해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영정은 국내외적을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 국제환경규제의 본격화, 무역과 환경의 연계,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환경 부하량의 증가, 환경질 악화에 따른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 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영정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경제와 환경의 통합, 환경용량의 보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영정 이념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페러다임의 대두로 우리의 환경영정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새로운 페러다임도 고객지향, 성과중심, 산업화·민영화 페러다임처럼 지방에 맡기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페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2002. 10. 1 이후 환경관리권을 모두 위임 받아 조직 또는 인원충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는 산업단지 현지에 「경기도 반월·시화 환경관리센터」를 개소하여 「환경관리권 위임전보다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환경관리에 임하고 있다.

시화공단의 경우 수도권내 비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이전하여 '86부터 '02년까지 조성되었으며 주거 지역과 공단이 인접되어 있고 폐기물소각업체 7개소와 소규모 영세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지리적 특성으로 찾은 안개와 저기압이 발생하고 해안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편성풍 영향으로 공단지역에서 발생된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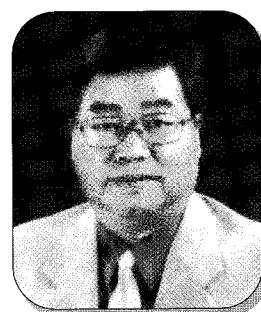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환경분야의 여러 가지 할 일 중에서 대기 중 악취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또한 위임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전보다 못하다는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위임 후 공단내 배출업소 3,772개소를 점검 9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단속결과 악취민원 발생이 전년대비 24%정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내 환경문제의 해결은 강력한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민주적 합의를 기초로 기업 스스로 의자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 경영을 유도하고, 영세기업 및 민원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닥터제」를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 및 처리기술의 개선 및 신기술 보급에 기여하여 공단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관리권 위임이후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위반업소와 위반율이 급증하여 공단내 배출업소에서 느끼는 체감 환경감시가 높아져있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단속활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환경부, 검찰, 시군등의 개별단속을 피하고 경기도 주관 합동단속으로 기관별 중복단속을 지양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며 단속시 배출업소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언행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전문기관 위탁 교육실시로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또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비용 부담이 필수적임을 배출업체에 주지시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공단내 입주업체의 자정 노력과 인근주민, 환경NGO 등의 협동으로 해결해 나 가야할 숙제라 생각되며 향후 우리도는 산업단지내 악취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김태한 경기도 환경보전/과장